

자유민주주의와 생태위기, 그리고 생태민주주의*

박 태 현**

I. 들어가며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확산, 심화되고 있는 생태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해 우리의 세계관(특히 인간중심적 세계관), 경쟁지향적 문화, 발전된 기술체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 관료주의적 행정제도 등 사회·경제·정치·과학/기술 등 전 영역에 구조화되어 있는 혹은 내재되어 있는 어떠한 체제, 조건 내지 경향성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치공동체의 정치원리의 그 어떤 속성에서 생태위기를 창출하는 요인을 찾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당연하게도 그 정치원리에 내재하고 있는, 생태위기-연관적 속성을 지양·제거하고, 생태적 온전성(ecological integrity)의 보전에 보다 친화적인 정치원리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생태친화적 정치원리의 재구축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단의 정치(철학)이론적 시도들은 비판적 정치생태학(critical political ecology)'으로 불리는데 비판적 정치생태학은 우리 헌정질서에서 규범적 기반가치로 설명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정치원리를 통한 생태친화적 정치체제의 구축을 환경정의의 확장이나 숙의민주주의의 수용 등 (환경)정의론과 민주주의 이론의 확대·심화 전략을 통하고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학이나 환경법학 뿐 아니라 법학 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생태문제의 맥락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포괄적·체계적 비판, 검토 및 대안 모색을 위하여 법학 영역에서도 진지하고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이

* 투고일자 : 2012. 11. 27 심사일자 : 2012. 12. 11 게재확정일자 : 2012. 12. 18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를 위한 작은 출발로서, 생태위기의 원인 및 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적 생태정치학이 자유민주주의에 제기하는 비판(Ⅱ)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포스트테제로 제시하는 생태민주주의의 내용 및 그 핵심적인 실현 원칙 내지 기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숙의민주주의(숙의제)에 관하여 살펴본다(Ⅲ).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우리의 도덕적·지적·정치적·제도적 측면에서 어떠한 도전적 과제를 던지고 있는지를 언급하고자 한다(Ⅳ).

Ⅱ. 자유민주주의와 생태문제

1. 자유민주주의의 특성과 생태위기

1) 생태위기와 연결된 것으로 주장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속성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이다.¹⁾ 우리 헌법학계에서는 헌법 전문과 여러 조항(제4조 및 제8조 제4항 등)의 표현을 근거로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 가운데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²⁾ 헌법재판소도 자유민주주의를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바탕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로 정의하고,³⁾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있다며,⁴⁾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원칙은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고 한다.⁵⁾

이처럼 우리 정체(政體)의 근본원리이자 기본가치질서로 규정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1)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2008, 136면. 여기서 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옹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사상적 입장을,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 또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을 내용적 적 특징으로 하는 정치원리를 말한다고 한다(같은 면).

2) 홍성방, 헌법학 개정6판, 현암사, 2009, 93면. 다만 계희열교수는 자유민주주의원리가 아닌 민주주의의 원리를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 본다고 한다(같은 면, 각주 27). 한편 헌법 전문과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8조 제4항에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고 있어 양자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갈리고 있다. 상위개념으로서 민주주의를 설정하고 이러한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있다고 가정하는 견해와 이전에 사회민주주의의 내용으로 추구되던 사항들은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이념적으로 구별할 실익이 없다는 근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같은 것으로 해석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 상세는 홍성방, 위의 책, 97-102면 참고.

3) 헌재 1990. 4. 2. 89헌가113 결정.

4)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결정.

5) 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 결정 등.

가 점증하는 환경파괴 및 생태위기와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⁶⁾ 동 주장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의 다음과 같은 속성이 생태위기와 결부되어 있다고 한다. 먼저 사회구성원들의 집합적 이해와 관심보다는 개인적 이해와 관심에 보다 민감하게 만드는 개인주의(individualism) 자체다(특히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계 맥락에서 운영되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개인주의를 강화한다고 한다).⁷⁾ 또 이 개인주의를 전제한 자유민주주의의 1인 1투표제는 투표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단기적인 사적 이해를 장기적인 공적 이해보다 중시할 때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⁸⁾ 자유민주주의는 그 자체 경제성장을 주된 가치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⁹⁾ 즉 물질적 성장이 현대 산업사회의 중심적 이데올로기가 된 이상 자유민주주의 또한 물질적 성장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이러한 경제성장으로 부터 귀결되는 물질적 이득을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각자의 지위나 계층과 상관없이 공유할 수 있음을 약속한다고 하며, 자유주의에 내재한 이러한 효율성과 평등성의 원리가 오히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하는 정책을 창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¹⁰⁾ 또 생태위기와 연결된 자유민주주의의 속성으로 지적되는 것이 특히 경제성장 지향성으로 인하여 자연을 도구로만, 즉 인간의 편익을 위한 수단 혹은 자원으로만 이해하고 취급하는 태도를 취하며 복잡하게 상호연결된 생태계의 내재적 가치(inherent values)를 무시하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다.¹¹⁾ 대의 원칙 및 다수결 원칙을 주된 운영원리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절차지향적 속성도 절차와

6) 윤순진, 생태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ECO 제11권 2호, 2007, 211면.

7) 개인주의는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반이다. 이에 대해서는 노명식, 자유주의의 역사, 책과함께, 2011, 37-63면을 참고하라. 노명식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가치들의 종합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고, 그 가치들을 떠받들고 있는 개인주의적 인간관과 사회관을 포괄하는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이해될 때에 비로소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자유주의의 개인적 자유, 관용, 재산권 등의 관념은 바로 이 개인주의에 뿌리를 박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개인을 사회와 사회제도 및 사회구조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고, 사회보다 더 기본적인 것으로 본다. 그것은 또 사회나 집단보다는 개인에게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요구는 사회의 그것보다 도덕적으로 앞선다고 본다. 그리하여 존재론적 개인주의는 도덕적 개인주의에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개인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는 그 본질상 반집단주의라고 한다.

8) 윤순진, 앞의 논문, 211-212면.

9) 노명식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자유주의의 가치 중의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자유주의의 역사적 성격을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 해왔고 또 하고 있다고 하며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와 더불어 성장해왔다고 한다(노명식, 앞의 책, 95면).

10) 윤순진, 앞의 논문, 212-214면.

11) 윤순진, 위의 논문, 214면. 이와 관련하여 Eckersley는 환경문제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무능을 인간중심주의적 특성에서 찾으면서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생태중심적 가치를 지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윤순진, 위의 논문, 215-6면에서 재인용).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적어도 그 체제가 성취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파괴로 귀결될 개연성이 있다고 한다.¹²⁾ 이와 관련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대의제는 시간과 공간, 종(species)의 차원에서 대표(representing)에 상당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즉 미래세대와 영토주권에 기반한 시민개념의 바깥에 존재하는 자, 인간이외의 생물종의 이익관심이 정치과정에서 적절히 대표되지 못하고 배제된다).¹³⁾ 동 주장은 결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생태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현 세대의 인간들로 권리의 주체를 제한하거나 자연을 도구화하는 등 생태적 긴장과 마찰을 유발하는 자유주의적 요소들을 걷어내면서 생태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계승하여야 한다고 한다.¹⁴⁾

2) 자유민주주의의 환경보호에의 잠재적 기여가능성?

한편 위의 주장과 달리 자유민주주의에는 생태적 가치에 이바지하는 무엇이 갖추어져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주장에 따르면 민주주의라는 틀을 이용하여 문제해결을 추구하려는 ‘민주적 실용주의’¹⁵⁾는 단순히 전략구상이나 파워 게임이 아닌 말과 글을 통한 의사

12) 윤순진, 위의 논문, 215면. 설사 절차에의 (적정) 참여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민주적 절차와 과정 자체만으로 환경문제를 건전하게 풀 수 있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갈등 해결방식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한계에 관하여는 진상현, 참여정부의 환경갈등 해결방식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한계, ECO 12권 1호, 2008을 참고하라. 진상현은 위 논문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전문가나 관료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제해결방식인 ‘행정적 합리주의’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함하는 유연한 참여과정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 ‘민주적 실용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을 절차적 합리성의 확대로 정의하며,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은 합리적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했다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비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생태적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3) 윤순진, 위의 논문, 216면. 대의민주주의의 생태학적 결함에 대한 상세한 비판은 정규호, 생태민주주의의 특성과 쟁점 그리고 과제, 주성수·정상호 편저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아르케, 2006, 184-7면을 참고하라. 정규호가 주장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생태학적 결함의 요지는 “현 세대 인류 그것도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반영된 분배적 이슈에 의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포섭됨으로써 생태적 이해관계와 장기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14) 윤순진, 위의 논문, 216-217면. 윤순진은 특히 Dryzek이 주목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담화적 합리성은 생태민주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자산으로 전승되어야 한다고 한다.

15) 민주적 실용주의는 Dryzek이 창안한 개념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행정의 재조정을 겨냥하여 행정 자체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러한 과제를 환경영향평가, 핵에너지의 미래에 관한 광범위한 자문과 같은 공공협의, 대안적 분쟁해결, 정책토론, 공공조사, 알권리에 관한 법률제정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하려고 한다(John S. Dryzek, The Politics of the Earth: Environmental Discours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이 책 1997년 초판 번역서로 정승진 옮김, 지구환경정치학 담론, 예코리브르, 2005. 156-167면. 이하 번역서의 해당면을 인용하기로 한다).

소통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작동에는 반드시 토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토의는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빌려 표현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토의 행위 자체는 환경 가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더 정확하게는 ‘집단적이고 총체적이며 장기적인 사고’를 촉진시켜준다고 한다.¹⁶⁾ ‘소비자’로서의 선호와 ‘시민’으로서의 선호를 구별하며 모든 개인은 두 가지 선호를 다 같이 보이는데 시민적 선호는 소비자적 가치의 이기적인 물질주의와는 반대로 집단적이고 공동체 지향적 가치에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하며 민주주의 체제에서 참여가 환경적 가치를 활성화해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¹⁷⁾ 즉 생태문제의 집합적 특성을 다룰 수 있는 높은 응답성과 책임성은 민주주의를 통해 개방된 사회에서 언론, 출판, 집회 등의 자유가 보장될 때 가능하며, 특히 정부나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집단의 역할이 커지기 위해서도 민주주의는 필연적이라고 한다. 또한 고도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가지는 생태문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구조화된 지식의 단순한 통합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주주의적 절차와 방식을 통해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¹⁸⁾

한편, 환경보호의 맥락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가지는(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긍정성에 대해 민주주의의 단순한 확장이 생태친화적 결과를 자연스럽게 가져다주지 않고, 오히려 생태적 가치가 현실 사회에서 비주류적인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통한 사적 권리의 확장과 의사결정의 개방은 생태문제를 악화하고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다.¹⁹⁾ Dryzek은 특히 민주적 실용주의의 문제해결적합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적 실용주의의 ‘평등한 시민들 간의 합리적 토론’의 이미지는 현실에서 권력과 전략이 작동하면서(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현상유지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기업은 정책결정에서 특권적 위치를 차지한다), 국가적 지상과제(자본주의적 시장이라는 맥락에서 모든 국가의 우선적 관심은 현실적/잠재적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²⁰⁾로 인하여 상당한 굴곡을 겪는다고 한다. 또한 토론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는 다양하고 이중 상당수의 이해관계는 물질적 이익이 그 동기로 작용하는데 민주적 실용주의의 다원적 측면은 모든 이해와 관심을 똑같이 정당한 것으로 다루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²¹⁾ 그리고 민주적 실용주의에서 ‘정치적 합리성’이란 모든 행

16) John S. Dryzek, 위의 책, 171-172면.

17) Mark Sagoff, *The Economy of the Ear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53, as quoted in John S. Dryzek, 위의 책, 172-173면.

18) 정규호, 앞의 책, 189-190면.

19) 정규호, 위의 책, 190면.

20) 정규호, 위의 책, 151-152면.

위자의 불만을 진정시켜주어야 한다는 것(그 순서는 정부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능력에 비례하여 결정된다)인데, 이것이 자연생태계의 온전한 보전에 관심을 가지는 ‘생태적 합리성’²²⁾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²³⁾

3) 생태위기의 대응과 자유민주주의의 결합: 파당 간 상호조정 형태의 정책결정방식과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의 문제성

Eckersley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환경가치를 옹호하는데 결함을 가진다고 한다. 먼저 환경이익은 단기적 개별이익이 아닌 장기적 일반이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적 재화 및 이익의 방어·보호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행위자 간의 정치적 협상보다는 공적 재화와 이익에 관한 사회적 숙의와 의사결정을 요구하지만(‘비판적 숙의’는 공익 보호를 지향하는 의사결정을 추동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정책 결정은 대체로 파당 간 상호조정(partisan mutual adjustment)의 형태를 취하여 자유민주주의는 ‘체계적 환경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²⁴⁾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대체로 단순히 과정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경합이익을 조정하고 균형을 맞추고자 하고, ‘자유주의적 다원주의(liberal pluralism)’²⁵⁾는 사회적 영향력과 의사소통능력에서 커다란 격차에 눈을 감은 채 모든 행위자는 동등하게 서로에 대해 관용적이어야 하고 또 타협하여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정책 수립 및 입법절차에 따라 협상, 조정된 결과에 맞추어 살아야한다고 하는데(자유민주주의는 경합하는 선호의 화해를 위한 공정한 수단을 제

21) John S. Dryzek, 앞의 책, 179-181면. Dryzek은 특히 보편적 원리를 가장한 특정 이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자원의 현명한 이용 운동은 자원의 분별 있는 사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그 지역에서 광물자원이나 방목권 공유지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22) 생태(학)적 합리성에 대해서는 박이문, 생태학적 합리성과 아시아 철학, 한국생활환경학회지 제6권 제2호, 1999; 윤용택, 생태적 합리주의의 철학적 기초, 철학·사상·문화 제11호, 2011 참고. 윤용택에 따르면 ‘생태적 합리주의’란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므로 합리성을 평가할 때는 생태적 요인까지 고려해서 평가하는 입장이라고 하며, 이러한 생태적 합리주의와 대치하는 입장으로 인간은 합리적 계산과 기술 수단을 통해 자연을 합리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지배적 합리주의’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생태적 합리성이 근대적 합리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일 수 없지만 이것이 근대적 합리성의 기저에 놓인 기계론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인간의 이성을 열린 이성으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한다.

23) John S. Dryzek, 앞의 책, 182면.

24) Robyn Eckersley, The Green State: Rethinking Democracy and Sovereignt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4, p.98. 특히, 이익단체 간 협상은 환원불가능한(nonreducible) 대규모의 생태문제를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특정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부분 부분 해체하는 방향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태문제를 적절하게 다룰 수 없다고 한다.

25) 이에 대해서는 William A. Galston, Liberal Pluralism-The Implications of Value Pluralism for Political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참고.

공함으로써 마치 모든 선호보유자가 동등하게 적절한 위치에서 자신의 선호를 분명히 표현하고 주장한 것처럼 옹호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적 우려는 일상적으로 경합하는 이익과 거래가능한 대상으로 전락한다고 한다.²⁶⁾

한편 이러한 자유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비평에 대해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라기보다 경합하는 인간의 선호(competing human preferences)라고 반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합법적 설득방법과 모든 가능한 전통적 자유주의적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활용한 후에도 ‘지속가능성 정책’을 위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효다수를 획득할 수 없다면, 환경지지자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견해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환경가치 지향적 또는 헌신적 삶(a good green life)을 보장할 수 없고 또 보장하여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환경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며 또 같은 방식으로 그 가치를 해석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⁷⁾ 즉 경합하는 인간 선호를 고려한다면 환경가치에의 헌신(결정)이 지속가능성의 보장에 이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정한 경로라는 관점은 개인의 도덕적 다원성에 개방적인 자유주의를 포기하여 비-자유주의자가 될 때에만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²⁸⁾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환경가치에의 헌신결정이 반드시 비(非)자유주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재반박이 가능하리라 본다. 왜냐하면 정치적·경제적 행위자의 선호는 그것이 하천이나 해양, 대기, 생물다양성 등과 같은 공공재(환경재)를 침식하거나 건강과 환경쾌적성(amenity) 또는 개인 및 공동체의 특정 지역의 소속감 등에 해를 끼치는 경우와 같이 자유주의의 최고의 가치인 타인의 자율성의 행사능력을 제한하는 상황에서는 문제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²⁹⁾

26) Robyn Eckersley, op. cit, pp. 99-100. 근본적 자유주의적 자유(계약의 자유를 포함한다)는 권리개념으로 표현되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헌법구조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반면 환경적 우려의 지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환경(가치)은 단지 좋은 삶의 문제로서 개인 선호의 문제가 되고 환경적 배려(environmental considerations)는 자유주의적 시민적·정치적 자유와 달리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협상가능한 것이 된다고 한다.

27) Robyn Eckersley, op. cit, p. 93. 한편 “환경가치에 으뜸패(trump)로서의 힘을 부여하자는 데에는 실로 다양한 반론이 예상됩니다. 환경가치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여러 사회적 가치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조홍식, 환경법의 해석과 자유민주주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 2010. 3, 268면)라는 언술과 도롱뇽 사건에서의 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시부분 “환경의 보전이라는 이념과 국토와 산업의 개발에 대한 공익상의 요청 및 경제 활동의 자유, 환경의 보전을 통한 국민의 복리 증진과 개발을 통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나 국가적 편익의 증대 사이에는 그 서 있는 위치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할 수 있[다.]”(부산고등법원 2004.11.29. 자 2004라41, 2004라42(병합) 결정)도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28) Robyn Eckersley, op. cit, p. 94.

29) Robyn Eckersley, op. cit, p. 96. 자유민주주의 이론은 선(the good)의 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결정의 영역에 맡겨두지만 생태민주주의 이론에서는 공공선의 재정지화를 추구하고 나아가

2. 자유민주주의(이론)의 생태위기에 대한 대응과 그 비판: Wissenburg의 억제원칙과 그 비판을 중심으로

지난 40년간 점증하는 환경악화와 대중의 지속적인 우려 및 항의에도 자유주의 정치 이론가들은 생태적 도전과제에 비추어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시도들은 거의 드물었다. 자유주의가 생태적 우려에 맞춰 조정하기 위하여 재정립되어야 하는지 여부, 또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그러해야 하는지 여부는 자유주의 정치이론가 사이에서 거의 학문적 논쟁대상이 되지 못하였는데 그 한 예외가 자유주의와 환경주의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한 Marcel Wissenburg이다. Wissenburg는 정치적·철학적 자유주의가 어느 정도까지 환경 현안과 우려를 체계 안에 수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사람의 선호-그것이 2세를 가지려는 것이든, 혹은 비싼 차를 소유하려는 것이든 그밖에 여하한 소비이든지 간에-를 변경하려 하거나 지시하려 하는 그 어떤 법적 제한도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전 지구의 맨하튼(Manhattan)화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그렇지만 그것이 개인 자유를 제약하는 생태적 지속가능사회보다 낫다고 주장한다.³⁰⁾

Wissenburg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 안에서 생태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시도로 억제원칙(the restraint principle)을 제시하고 있다.³¹⁾ 동 원칙에 따르면 희소재(scarce goods)에 대한 권리는 “필요성/기본적 생존”에 우선 충족한다는 한계 내에서, 장래의 계속적 사용/분배를 위하여 가용적이어야 함”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어떠한 재화도 그것이 불가피하지 않는 한 그리고 완전동일한 재화로 대체되지 않는 한(만약 대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동등한 재화로 대체되어야 하고 이것마저도 불가능하면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³²⁾ 이러한 억

개인의 선의 문제까지 정치화(politicization of the private good; 정치영역에서 토론 또는 담론의 주제로 상정하여 그것의 바람직함 등을 공론화하는 것을 말한다-필자 부기)하고자 한다. 한편 비판적 정치생태학은 생태시민성(ecological citizenship)을 배양하고 공동관심사에 공적 심의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경제 활동이 생태적 온전성 또는 생물다양성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지속가능성의 매개변수(parameters)를 설정하여 법적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공공재를 보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한다.

30) Robyn Eckersley, op. cit, pp. 94-95.

31) Eckersley는 이 원칙과 관련하여 Wissenburg가 재산권 방어 중심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현저히 구별되는, 마치 청지기적 윤리(stewardship ethic)와 같은 데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중대한 혁신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한다(Robyn Eckersley, op. cit, p. 95).

32) Marcel Wissenburg, Green Liberalism: The Free and the Green Society, UCL Press, 1998, p. 123, as quoted in Robyn Eckersley, op. cit, p. 102.

제원칙을 역으로 오염 발생에 적용한다면, 환경훼손적 폐기물은 불가피하지 않는 한 발생 시켜서는 안 되고, 만약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자연은 회복되어야 하고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³³⁾ 요약하면, 인간은 현세대의 기본적 생존이 걸려있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자연의 사용에 자유로울 수 있지만 남용하거나 파괴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며, 동 원칙은 따라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계획-그 계획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정한 기회를 가능한 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주의적 정의를 확장한 것이라고 한다.³⁴⁾

Eckersley는 동 원칙이 자연의 남용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환경개발자에게 부담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동 원칙은 자유주의 이론의 급진적 제안의 한 사례를 제공한다고 평가한다.³⁵⁾ 또 현대국가가 시행하는 수많은 환경법의 저변에 깔려 있는 논거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경적 실천에 부합한다고 한다.³⁶⁾ Wissenburg의 원칙은 그러나 자연의 내재적 가치라는 관념을 거부하고, 비인간세계를 향하여 철저히 도구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³⁷⁾ 억제원칙이 인간자유를 위한 생태적 조건이라는 근본문제를 다룸에 있어 전통적 자유주의 이론에서 탈피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유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다루기보다는 이를 불가피하게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세대 사람들의 기본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보전과 생태계의 보호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한다.³⁸⁾

3. 자유주의 도그마에 대한 비판적 생태정치학의 비판: (자아)자율성과 국가중립성의 탈신화화

비판적 생태정치학은 생태문제의 발생 및 심화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자유주의 도그마’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강력한 개인주의 및 자기이익 추구적 합리적 행위자(개념)를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태도, 생물세계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을 부인하고 자연세계에 대한 인간예외주의의 관념을 발생시킨, 인류와 자연에 대한 이중인식, 사유재

33) Wissenburg, op. cit, p. 166, as quoted in Robyn Eckersley, op. cit, p. 102.

34) Wissenburg, op. cit, p. 168, as quoted in Robyn Eckersley, op. cit, p. 102.

35) Robyn Eckersley, op. cit, p. 102.

36) Wissenburg의 억제원칙은 미국과 우리 환경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성의 법리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박태현, 환경적 의사결정의 두 방식에 관한 일 고찰 -보전 중심의 공유수면관리에 대한-, 환경법과정책 제9권, 2012. 11. 참고.

37) Robyn Eckersley, op. cit, p. 103.

38) Robyn Eckersley, op. cit, pp. 103-104. Wissenburg도 억제원칙이 경우에 따라 어떠한 생태적 보장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산권에 신성성 부여, 자유는 오직 물질적 풍부함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다는 인식 및 발전된 과학적·기술적 진보를 통하여 자연을 합리적으로 관장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 따위.³⁹⁾

이러한 자유주의 도그마는 중국적으로 ‘(자아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의 이상으로서 수렴되는데 동 개념의 근본문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존재론(ontology)-사회적·생물학적 절연-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즉, 자율적 존재로서 자아라는 자유주의적 존재론의 근본문제는 인간적 혹은 비인간적 타자를 일련의 제약(constraints)으로 환원하고, 이를 그 제약 속에서 개별주체의 자아실현이 이루어지는 ‘배경’으로 설정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정상황에서는 타자의 필요와 요구는 타자의 희생아래 자율성을 증진하는 합리적 이익극대(추구)자의 그것의 바깥에 주어진 것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우리 자아의 생태계 및 생물세계 일반에 대한 비도구적 의존성을 거부하는 태도를 낳게 되는 것이다.⁴⁰⁾ 이러한 자유주의적 자아는 합리적 경제행위자로서 재산권의 이용에 따른 수익은 사유화하고 그 사회적·생태적 비용은 타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데서 잘 예시된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존재론에 비판적인 관점에 따르면 생태계의 온전성이 인간의 장기적인 개별적·집단적 안녕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이는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생태공동체 및 비인간적 타자를 포함하도록 확장되는 때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⁴¹⁾

한편, 이러한 자유주의에 대한 존재론적 비평은 자유주의적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특정 유형의 자아를 강화하는지 보여줌으로써 ‘국가중립성(state neutrality)’이라는 자유주의적 이상에 또한 이의를 제기한다.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궁극적 이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정치시스템 뿐 아니라 합리적, 자율적 자아를 정상적(normal)인 것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자아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또 이에 보답하는 자유주의적 사회적 조합을 필요로 한다. 즉 자유주의 국가는 자유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구조를 적극적으로 재생산하여야 한다.⁴²⁾

Ⅲ. 생태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확대·심화를 통한 생태문제에의 대응

39) Robyn Eckersley, op. cit, p. 109.

40) Robyn Eckersley, op. cit, pp. 104-105.

41) Robyn Eckersley, op. cit, p. 105.

42) Robyn Eckersley, op. cit, pp. 105-106.

1. 생태민주주의의 등장배경, 핵심내용: 생태정의와 속의적 의사결정

앞서 본 자유민주주의의 생태학적 결함을 목격하면서 1980년대 후반 들어 생태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보완적 결합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⁴³⁾ 특히 생태민주주의의 등장은 무엇보다 생태문제가 중요한 정치현안으로 부각된 데 영향 받은 바 크다.⁴⁴⁾ 생태문제는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적 구분을 토대로 자연계 내에서 생태적·물리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환경문제와 달리, 자연과 사회의 밀접한 상호관계성에 주목하여 ‘사회적 토대로서 자연’, ‘사회화한 자연’의 사회정치적 의미와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인 변화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따라서 이러한 생태문제는 사회문제이자 정치문제로 나아가 민주주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⁴⁵⁾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와 구분되는, 생태적 위기를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생태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윤순진은 생태민주주의를 “다양한 권리주체 간의 생태정의 실현을 주요한 내용으로 추구하면서 속의적 의사결정과정을 주요한 절차로 하는 정치적 원리이자 기제”로 간결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생태민주주의는 ‘환경정의’의 논의⁴⁶⁾를 미래세대와 다른 생물종 등 자연과 사회의 정의로운 관계까지 확장(즉 권리주체를 미래세대와 다른 생물종까지 확장)하는 ‘생태정의’를 실질가치로 삼으면서,⁴⁷⁾ 담화적 합리성 기초로 한 사회적 소통과정으로서 속의과정을 이러한 생태정의의 실현에 필수적인 기제로 보게 된다.⁴⁸⁾⁴⁹⁾

그렇다면 생태민주주의는 무엇을 자신의 과제로 삼는가. Eckersley는 현대 풀뿌리 환경적극주의 및 그것의 확장대인 녹색운동의 역사는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확대·심화 전략 추구를 통하여 위해의 발생 및 전가(displacement)의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의 전개과

43) 정규호, 앞의 책, 189면.

44) 정규호, 위의 책, 183면.

45) 생태문제의 원인이 결국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현실 사회체제의 ‘정상성 속에 내재된 비정상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인 진단과 해결 방안 모색에서 사후처방적이고 개량주의적 접근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정규호, 위의 책, 183면).

46) 환경정의는 환경편익과 부담의 공평한 배분을 지시하는 ‘배분적 정의’, 모든 사람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는 ‘실질적 정의’ 및 정책과 법, 계획의 결정이나 이행과정에 참여를 중시하는 ‘절차적 정의’로 구성된다(윤순진, 앞의 논문, 218-9면).

47) 윤순진, 위의 논문, 220-221면.

48) 윤순진, 위의 논문, 221-222면.

49) 생태민주주의의 이론적 자원으로 생태아나키즘, 생태근대화론, 생태정의론 및 심의민주주의론을 들며, 생태문제처럼 고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한 가치관여적 문제에는 새로운 의사결정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데 2000년대 들어 민주주의적 수단을 통한 보다 나은 생태적 결과를 창조하는 방안으로 심의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정규호, 앞의 책, 197면).

정이었다고 하며, 따라서 위해의 회피 및 위해의 부당한 전가의 회피가 생태민주주의의 이중과제를 구성한다고 한다.⁵⁰⁾ 여기서 위해의 발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대표되어야 할 기회는 사회적 계급과 지리적 위치 국적, 세대 또는 종에 관계없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자에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생태민주주의의 공리라고 한다.⁵¹⁾ 다만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 모두가 항상 실제로 사전동의에 이른다든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않으므로 타자를 위하여 위해적 함의를 가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대표자는 마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가 현재하고, 적절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아 경우에 따라 반대를 제기할 수 있음을 가정한 채 대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⁵²⁾ 이는 ‘인간 편익에의 이바지에 기여’라는 관점을 넘어 비인간적 이익의 안녕을 고려하게 하는 기제라고 한다(여기서 배제된 타자의 대표(Representing “Excluded Others”)라고 하는, 민주적 과정에서 대표의 중요한 역할이 인정된다). 또, “살고 또한 살게 하라(live and let live)”라는 도덕원칙을 광범한 생태공동체 내 모든 거주자에게 확장함으로써 자유주의와 달리 순수 도구적 자세를 피하려고 한다.⁵³⁾

2. 숙의민주주의의 의미와 생태정치학에의 함의

1) 숙의민주주의에서 숙의의 의미와 숙의의 원칙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태민주주의는 숙의과정을 생태정의의 실현에 필수적인 기제로 보고 있는바 이는 1990년대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 이론으로 출현한 숙의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결과이다. 숙의민주주의에서 핵심용어는 “deliberation”이다. 이 용어는 숙의의 중요성을 간파한 동시대의 저명한 비판이론가 하버마스와 자유이론가 롤스 덕택에 정치이론 분야에서 조명을 받았다.⁵⁴⁾ 이러한 숙의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투표 또는

50) Robyn Eckersley, op. cit., p. 109. 현대민주주의가 발전시킨 특정한 자유주의의 형태를 역사화한다면 ‘생태적’과 같은 다른 접두사를 취하는 민주주의 및 국가에 관한 사고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Robyn Eckersley, op. cit., p. 106).

51) 이는 “그 위해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위해를 발생시키는 의사결정 또는 정책에 참여하거나 혹은 대표되어야 할 유의미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우리에게 친숙한 원칙의 변용으로, 이는 사람과 공동체는 자유로우면서도 지식·정보에 기반한 사전동의 없이는 회피가능한 위해의 영향권역 내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주장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52) Robyn Eckersley, op. cit., p. 111.

53) Robyn Eckersley, op. cit., p. 113.

54) Masakazu Matsumoto, “Deliberative Democracy and its Implications for Environmental Politics”,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Sociology No.11, p.93. 이와 관련한 두 학자의 저서는 다음과 같다. Jürgen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여론조사 등 순수 선호-집합적(preference-aggregative) 모델의 결점을 교정하고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의 시대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이상을 재창안할 것인가 하는 지적 고민의 산물이라고 한다.⁵⁵⁾ 숙의민주주의란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견해와 판단 그리고 선호를 변환시키는 데 가치를 두는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⁵⁶⁾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에서 민주주의 기능은 공공정책에서 인민의 다양한 이익을 대의하는 것으로 보았다. 숙의민주주의자들은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능은 인민의 선호를 단순히 집결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⁵⁷⁾ 새로운 선호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하며 시민사회에서 정치적 숙의를 통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를 성찰하고 상호이해를 형성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이러한 숙의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선호를 검토하고,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거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는다(따라서 성찰은 성찰자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대향행위로 성찰적 측면은 그 자체 비판적이다).⁵⁸⁾⁵⁹⁾

여기서 어떻게 그리고 왜 숙의과정을 통하여 선호가 변환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결정에 이르는 그 (숙의)과정은 최초의 선호가 타자의 견해를 고려하면서 변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⁶⁰⁾ Harbermas에 따르면 오늘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trans. William Rehg, The MIT Press, 1996 (한국어번역서는 박영도·한상진 옮김, 사실성과 타당성 -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 나남신서, 2007),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한국어번역서는 장동진 역,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2008).

55) Cass R. Sunstein, “Preferences and Politic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0 (1), 1991, pp. 3-34, as quoted in Masakazu Matsumoto, op. cit., p. 93.

56) Masakazu Matsumoto, op. cit., p. 93.

57) 김경재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은 27일 한 방송에서 “48%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51%를 대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는데(매일경제 2012. 12. 28.자 기사) 이는 정치(과정)을 선호의 결집(과정)으로 보는 관점의 한 실례라 하겠다.

58) Masakazu Matsumoto, op. cit., p. 93.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능을 투표 중심의 대의(vote-centered representation)에 둔다면, 심의민주주의는 목소리 중심의 선호의 전환(voice-centered transformation of preferences)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두 유형의 민주주의 간의 중요한 차이가 드러난다고 한다.

59) Robyn Eckersley는 숙의민주주의의 특성으로 (1) 제약 없는 대화(unconstrained dialogue), (2) 포용성(inclusiveness), 그리고 (3)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들고 있다(Robyn Eckersley, op. cit., pp. 116-117). 한편 Maeve는 숙의민주주의를 지지하는 5가지 논거들-(1)공공적 숙의과정의 교육적 힘, (2) 공공적 숙의 과정의 공동체-형성적 힘, (3) 공공적 숙의의 절차의 공정성, (4) 공공적 숙의결과의 지적 질, (5) 숙의민주주의에 의하여 규정된 정치이상(“whom we are”)과의 조화-을 각각 살펴보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까지 논거는 적절하지 않고 마지막 다섯 번째 논거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방이라고 하는 견해로는 Maeve Cooke, “Five Arguments for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al Studies 48 (5), 2000, pp. 947-69 참고.

60) Masakazu Matsumoto, op. cit., p. 94. 숙의는 타자의 견해를 고려할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담론 규칙이 숙의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말하고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날 가치다원화 세계에서 보편화 원칙⁶¹⁾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 숙의의 실행이라고 한다.⁶²⁾ 그러나 숙의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은 단순히 공적 토론을 증진하는 데 있지 않고 공정한 협력의 조건을 추구하는 자유롭고 동등한 사람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져야 하는 근거·이유(reasons)에 호소하는 숙의적 의사결정의 중심성을 분명하게 긍정하는 데 있다.⁶³⁾

Gutmann과 Thompson은 심의조건의 원칙으로 ①상호성 원칙, ②공개성 원칙 및 ③책임성 원칙을, 심의내용의 원칙으로 ①기본적 자유 원칙, ②기본적 기회 원칙 및 ③공정한 기회 원칙을 들고 있다.⁶⁴⁾ 강경선은 심의민주주의 특징으로 개방성, 참여성 그리고 공론의 공동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고, 심의의 조건으로 ①국가와 경제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 ②타당성 주장의 비판적 교환, ③성찰적 태도, ④역지사지의 자세, ⑤진실된 태도, ⑥개방성과 평등성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⁶⁵⁾

2) 숙의민주주의의 생태정치학적 함의

오늘날 심의민주주의가 환경정치학의 맥락에서 자주 거론되는데 이는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으로 오늘날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모든 주체는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심의의 공개성), (2) a. 모든 사람은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허용된다. b. 모든 사람은 담론과정에서 그 어떤 주장의 원용도 허용된다. c. 모든 사람은 자신의 태도, 욕망,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 허용된다(심의자 간의 평등성), (3) 연사는 내외적 강제에 의하여 위에서 규정된 권리의 행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컨센서스의 비강제성)(Masakazu Matsumoto, op. cit., pp. 95-96).

61) 하버마스의 보편화 원칙(Universalization Principle)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어떤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 준수에 따른 개별주체의 이익과 지향가치에 예측가능한 결과와 부작용이 관계자 모두에 의하여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때 타당하다(Habermas, The Inclusion of the Other, p. 42)(Masakazu Matsumoto, op. cit., p. 102 주18에서 재인용).

62) Masakazu Matsumoto, op. cit., p. 96.

63) John. J. Worley, Deliberative Constitutionalism, Brigham Young University Law Review, 431, 2009, p. 441. Worley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설명으로부터 ①공동선의 원칙, ②공적 이성의 원칙, ③선호전환의 원칙, 그리고 ④평등원칙이라는 원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한다.

64) 장동진, 심의민주주의, 박영사, 2012, 67-88쪽(원서의 서지정보는, Gutmann and Thompson, Democracy and Disagreement,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기본적 기회의 원칙은 정부는 모든 시민들이 적정수준의 삶을 영위하고 다른(비기본적) 기회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기본적 기회란 좋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가치와 서비스를 말한다(건강보장, 교육, 신체적 안전, 주택, 음식, 고용 및 수입과 같은 것). 한편 공정한 기회의 원칙은 고수준의 가치들(가령 기 능직skilled jobs)의 분배와 관련되는데 이것들은 필요보다는 자격에 의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65) 강경선,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민주법학 제50호, 2012. 11, 328-332면.

면 숙의민주주의는 환경정치학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 것일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환경적 타자(Environmental Others)의 포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지구적 환경문제의 특성은 특정국의 행위나 활동이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현세대의 행위나 활동은 미래세대에 또한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지구적 환경현안은 현존하는 국민국가의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 발생하는데 그러한 현안을 다룸에 있어 타자의 견해의 포용하고자 하는 숙의민주주의는 환경적 타자의 범위를 공간적으로 확대할 기회를 제공한다. 즉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all possibly affected persons)”에는 오염발생국의 시민이 아닐 수 있는데 담론 원칙⁶⁶⁾을 만족시키려면 적어도 비시민인 외부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⁶⁷⁾ 또한 미래세대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지구적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데 숙의민주주의는 환경적 타자의 범위를 시간적으로 확대할 기회를 제공한다.⁶⁸⁾ 끝으로, 환경적 타자의 존재론적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오늘날 지구적 환경문제는 동·식물과 자연 일반에 직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미래세대, 인간 이외의 종을 포함하여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는 타자의 이익은 공적 토론의 도덕화 효과(the moralizing effect of public discussion)를 통하여 우리의 확장된 선호에 반영되어야 한다.⁶⁹⁾ Goodi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주주의를 우리 모두가 각자 우리를 둘러싼 더 큰 세계의 이익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나을 뿐 아니라 경험상 더 현실적일 수 있다.⁷⁰⁾

3. 생태가치를 지향하는 의사결정방식 및 제도 설계: 생태적 소통전략

66) 위 주 61 참고.

67) Masakazu Matsumoto, op. cit., p. 97.

68) 여기서 현세대는 미래세대와 직접 의견 등을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환경적 타자의 범위를 미래세대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숙의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Robert Goodin는 가령 유아나 정신적 무능력자도 민주적 숙의에 실제 참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정책수립 과정에서 그들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며 같은 주장이 미래세대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Robert E Goodin, *Enfranchising the Earth, and its Alternatives*, Political Studies, 44 (5), 1996, p. 843, as quoted in Masakazu Matsumoto, op. cit., p. 99).

69) Masakazu Matsumoto, op. cit., p. 99.

70) Robert E Goodin, op. cit., p. 844, as quoted in Masakazu Matsumoto, op. cit., p. 99.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ideally) 문제해결방식으로 비춰지는 이러한 속의민주주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인간중심적 소통적 실천이며 현실 정치제도에 서 심의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것이 많고, 다른 한편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대화만으로 미래세대나 자연생태계의 가치를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⁷¹⁾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민주주의에서는 자유로서의 권리와 생태학적 책임 사이에 긴장, 의사결정과정에서 공동의 목표가치와 다양성을 조화시켜야 하는 딜레마(생태권위주의로도, 공적 책임성을 확보하여 무책임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로도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결정의 신속성 요구와 생태문제의 복잡성에 따른 의사결정의 성찰성 요구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권리 책임성과 자율성의 가치를 한 차원 높게 이어주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된다.⁷²⁾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 생태민주주의자들은 생태적 소통전략으로, 예측적 내부화(anticipatory internalisation), 대리인을 통한 대변(proxy representation), 담화적 가상적 파트너(imaginary partnership) 지위 설정, 대화적 구상(discursive design) 등을 제안하고 있다.⁷³⁾

여기서 우리 사회에서 속의과정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결과를 도출한 사례를 통하여 속의의 제도화 문제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유역치수종합계획과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되는 하천법상 최상위계획이다. 그런데 2001년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에 대해서는 특히 물 수급 과다 추정 등의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계획수립 전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협의체는 4개의 하위협의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하여(참여인원 총 143명, 회의개최횟수 총 47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계획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모든 진행과정을 웹사이트([www. waterplan. go. kr](http://www.waterplan.go.kr))에 공개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였다.⁷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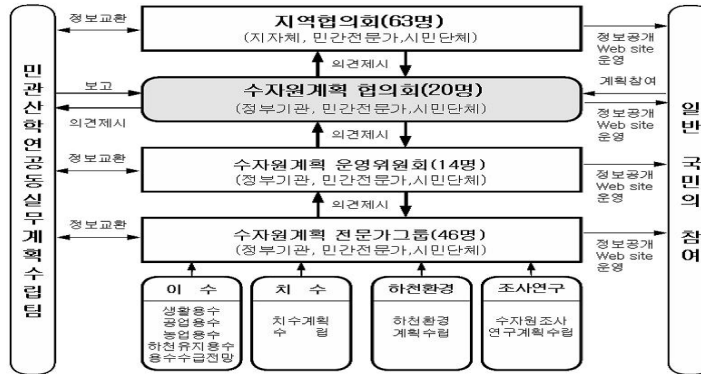
71) 정규호, 앞의 책, 198면.

72) 정규호, 위의 책, 199-200면.

73) 이에 대해서는 정규호, 위의 책, 201-203면 참고.

74) 건설교통부 2006. 6. 30.자 보도자료(수자원장기종합계획(06~20) 확정).

< 협의체 구성 · 운영 체계 >



출처: 건설교통부 2006. 6. 30.자 보도자료(수자원장기종합계획(06~20) 확정)

위 협의체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수립된 2006년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에서는 2011년 물 수요량 예측치가 2001년 대비 약 18억m³이 감소하였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 수요량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댐건설 계획이 불필요하게 되어 댐건설장기계획도 연동하여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처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사회적 숙의과정을 통하여 수정됨에 따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댐건설 계획이 부분적으로 취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바 이는 “잘 설계된 숙의과정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결과를 낳는다”는 가설을 증명하는 한국적 한 사례라 하겠다.⁷⁵⁾ 숙고자가 자신의 결정이 사회적 · 생태적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적 정치경제영역 내에서 또 그 밖에서까지 고려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면 위험의 창출 및 위험의 전가에 관한 결정이 정책을 수립하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하는 Eckersley의 주장⁷⁶⁾도 그런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⁷⁷⁾

75) 숙의과정은 자아중심적인 사적 선호(ego-centric private preferences)를 생태중심적인 공적 선호(eco-centric public preferences)로 변경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가치에 보다 더 의식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헌신(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이 가설을 증명하는 몇 가지 경험적 사례에 관해서는 Adolf Gundersen, *The Environmental Promise of Democratic Deliber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5 참고. 우리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사회적 수립과정을 통하여 적어도 국민국가 경계 내에서 대의를 통한 자기규율(self-governance)이라고 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이 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담화적 대의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적 탐구와 더불어 담화적 대의가 현실에서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는 조건과 상황 등을 연구하여 이것이 적절하게 실행될 수 있게 하는 제도설계의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76) Robyn Eckersley, op. cit., p. 133.

77) Dryzek은 우리가 항상 그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화적 대의(discursive representation)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담화적 대의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혹은 그것의 조합이

IV. 나가며: 도덕적 · 지적 · 정치적 · 제도적 측면에서 생태민주주의가 던지는 도전과제

자유주의는 현대에서 개인 권리의 보호라고 하는 국가의 존립 · 유지를 위한 고유한 논거 및 이를 위한 권력분립 및 대의정부라고 하는 공식구조와 민주적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 국가권력이 행사될 수 있는 조건 및 자유적 개인으로 구성되는 시민사회에 대하여 정합적인 설명체계를 제공하는 정치원리이자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규범적 가치이다. 따라서 함부로 폐기 또는 지양되어야 할 이념은 결코 아닐 것이다.⁷⁸⁾ 그러나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반인 개인주의 및 이 개인주의가 환경적 맥락에서 발현된 인간중심주의는 오늘날 전지구적 규모로 확산, 심화되고 있는 생태위기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환경보호와 사회정의 간의 연계성을 확대하고자 민주주의를, 복잡한 경제적 · 기술적 및 생태적 상호의존적 세계에 조정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바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모색과 성찰적 접근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모두를 위한 생태적 자유는 오직 생태적 책임성(ecological responsibility)을 가능하게 하고 또 이를 집행하는 협치 형태 아래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면 생태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상호 대립적 · 배타적 관계로 보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지양한 그 어떤 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⁷⁹⁾

생태민주주의는 인민과 영토에 대한 민주주의의 전통적 인식을 재개념화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생태민주주의는 도덕적 · 지적 · 정치적 · 제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도전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1) 도덕적 측면에서 그것은 비인간적 타자 및 인간과 비인간적

든지간에 정책결정을 더 합리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자아의 다양한 양상을 충실하게 대표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심의민주주의의 약속의 실현을 지원하며, 나아가 특정한 의사결정의 영향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민주주의 이론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John. R. Dryzek and Simon Niemeyer, Discursive Represent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2 no. 4, 481, 2008, p. 492).

78)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주의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한, 자유주의는 설불리 내릴 수 없는 것발이라고 하며, 행정법의 맥락에서 행정법상의 논쟁들에 담겨있는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고 법의 정치성을 분명히 하는 비판적 법 연구를 진행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이계수, 자유주의와 한국, 행정법연구 제31호, 2007, 70-71면.

79) 이런 점에서 생태민주주의는 반자유주의(antiliberal)적 민주주의라기보다 탈자유주의적(postliberal) 민주주의라고 보아야 한다는 Eckersley의 언급은 자유주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관하여 유의미한 단서를 제공해준다고 할 것이다(Eckersley, op. cit. p. 107). 한편 진보적인 혁신자유주의로서, '성찰적 개인주의'를 시금석으로 삼는 급진자유주의(radical liberalism) 정치철학도 진지하게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급진자유주의 정치철학에 대해서는 윤평중, 급진자유주의 정치철학, 아카넷, 2009 참고.

존재가 의존하는 생태공동체의 존엄성과 내재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도덕적 상호성 요건을 완화하고 전통적 시민성의 관념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전적이다. (2) 지적·인식적 측면에서 민주적 숙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미래세대 및 비인간적 타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유의미한 실천적 방법을 찾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도전적이다. (3) 정치적 측면에서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활동에 책임을 지는 행위자의 지위를 재설정하여 그들의 자율성의 행사(재산권의 행사를 포함한다)에 생태적 제한조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리하여 공개된 비판적 의사소통적 환경에서 그들은 말 그대로 또는 은유적으로 잠재적 피해자 또는 대표자와 대면하여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활동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피해자 또는 대표자에게 수용가능한 정당화를 제공하는데 실패한 경우 생태적 위해를 발생시키는 활동은 환경정의의 문제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도전적이다. (4) 제도적 측면에서 국민국가(nation-state)의 경계를 반드시 도덕적으로 배려가능한 존재들의 공동체와 동일한 범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전적이다. 이는 민주적 자기결정의 적절한 장소는 국민국가의 문화와 감정, 영토적 경계에 구속되지 아니한 국민공동체여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 내지 시민공화주의의 이념에 도전하는 것이다.⁸⁰⁾

주제어 :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생태민주주의, 생태적 책임성, 비판적 정치생태학, 환경적 타자

80) Eckersley, 앞의 책, 113-114쪽.

참 고 문 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2008
- 홍성방, 헌법학 개정6판, 현암사, 2009
- 노명식, 자유주의의 역사, 책과함께, 2011
- 윤평중, 급진자유주의 정치철학, 아카넷, 2009
- 장동진, 심의민주주의: 공적 이성과 공동선, 박영사, 2012
- John S. Dryzek, The Politics of the Earth: Environmental Discours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정승진 옮김, 지구환경정치학 담론, 예코리브르, 2005)
- Marcel Wissenburg, Green Liberalism: The Free And The Green Society, Routledge, 1998
- Robyn Eckersley, The Green State: Rethinking Democracy and Sovereignt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4
- 강경선,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민주법학 제50호, 2012
- 윤순진, “생태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ECO 제11권 2호, 2007
- 윤용택, 생태적 합리주의의 철학적 기초, 철학·사상·문화 제11호, 2011
- 이계수, 자유주의와 한국, 행정법연구 제31호, 2007
- 정규호, 생태민주주의의 특성과 쟁점 그리고 과제, 주성수·정상호 편저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아르케, 2006
- 조홍식, 환경법의 해석과 자유민주주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 2010
- 진상현, 참여정부의 환경갈등 해결방식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한계, ECO 12권 1호, 2008
- John. J. Worley, Deliberative Constitutionalism, Brigham Young University Law Review, 431, 2009
- John. R. Dryzek and Simon Niemeyer, Discursive Represent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2 no. 4, 481, 2008
- Maeve Cooke, "Five Arguments for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al Studies 48 (5), 2000
- Masakazu Matsumoto, "Deliberative Democracy and its Implications for Environmental Politics",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Sociology No. 11, 2009

Abstract

Liberal Democracy, Ecological Crisis, and Ecological Democracy

Park, Taehyun

Law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Liberalism provided its own rationale for the state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viduals, an account of its formal structure separation of powers, representative government, an account of the terms on which coercive state power may be exercised, and an account of civil society made up of autonomous individuals. Therefore, liberalism, which is protected as a normative underlying value under our constitution, is not to be such one as normative ideal outdated thereby to be discarded. Yet, 'individualism' on which liberalism stand and 'anthropocentrism' as it revealed in the environmental context are pointed out as a fundamental cause to ecological crisis that is spreading and deepening at the scale of globe.

In response to this reality, the quest of critical political ecology may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adjust democracy to a world of more complex and intense economic, technological, and ecological interdependence in order to extend the links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cial justice. Ecological freedom for all can only be realized under a form of governance that enables and enforces ecological responsibility. Ecological democracy is a postliberal rather than antiliberal democracy, and, therefore, it seems to be appropriate to look that liberal democracy and ecological democracy is not an mutual exclusive but supplementary relationship.

The claim for ecological democracy raise complex moral, epistemological,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 It is morally challenging because it loosens the requirement of moral reciprocity that is conventional notions of citizenship by seeking to extend democratic consideration to a somewhat indeterminate community whose members are not all capable of reciprocal recognition.

The claim is epistemologically challenging because it asks those who are able

to participate in democratic deliberations to search for meaningful, practical ways of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others who may not be fully knowable and cannot represent themselves(i.e. future generations and nonhuman others).

The claim is politically challenging because it calls for ecological qualifications to the exercise of individual human autonomy(including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by repositioning actors responsible for risk-generation activities so that they must literally and/or metaphorically face and answer potential victims in an open and critical communicative setting.

The claim for ecological democracy is institutionally challenging because it does not regard the boundaries of the nation-state as necessarily coterminous with the community of morally considerable beings. This poses a direct challenge to the ideas of liberal nationalism and civic republicanism, both of which argue that the proper locus of democratic self-determination should be the national community bounded by culture, sentiment, and the territorial borders of the nation-state.

Key Words : Liberalism, Liberal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Ecological Democracy, Ecological Responsibility, Critical Political Ecology, Environmental Others